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

정 성 진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중 정부는 교육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채택한 것 같다. 실제로 이 해찬 교육부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도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언명했으며, 신정부 출범후 각 대학에 강요되고 있는 학부제나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의 조치들은 이른바 경쟁과 수요자 중심주의와 같은 시장원리를 교육부문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현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학부제나 대학평가, 대학설립과 정원조정의 자율화 조치 등은 이미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과 함께 시행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새로워진 것이 있다면, 그 교육개혁의 성격이 신자유주의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그것을 더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교육의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는커녕 교육의 황폐화와 경제위기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는 규제 완화, 세계화와 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개혁이었다. 1960년대 이후 30년간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주도적 발전방식이 1990년대 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구조적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자,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이에 대처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외환 금융위기의 폭발이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현재 위기의 직접적 배경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과 ‘충격요법’을 받아들인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잃어버린 10년’과 199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 제국의 ‘경제식민지화’ 사례들은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처방이 아니라 민중을 지옥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었음을 보여준다.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도와 실업, 자살의 폭발적 증가, 빈익빈 부익부의 유례없는 심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세기말 전 세계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까지 도입될 경우, 그 결과는 가공할 것이다. 초스도프스키는 『빈곤의 세계화』라는 책에서 IMF의 신자유주의가 강요된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육부문이 황폐화되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말이지, 사회의 다른 모든 부분이 시장기구와 경쟁원리에 맡겨진다 할지라도, 가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영역, 즉 마지막까지 '비' 혹은 '반' 신자유주의적으로 남아있어야 할 곳이 교육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이론은 자본주의에서 교육이 노동력 재생산 기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력은 화폐와 함께 그 재생산과 관리가 자기조절적 시장기구에 일임될 수 없고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종류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원리상 자유시장에 맡겨질 수 없는 교육을 그렇게 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말로는 교육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은 시장원리의 도입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노동력 육성과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탐욕을 반영한다. 하지만 교육의 자유시장화, 즉 '인적자본'의 완전한 시장조절이란, 자본주의 원리상 환상에 불과하며, 만약 그 환상이 현실로 된다면, 노동력의 재생산기구 자체가 붕괴되어 자본주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신자유주의의 모델 국가로 알려진 오늘의 미국에서 교육정책이 오히려 신자유주의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클린턴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교육투자를 통한 고급노동력(이른바 '상징분석가')의 육성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연한을 사실상 대학 1학년까지 확대하는 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세가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교육까지 신자유주의화하자는 주장은 신자유주의 자체를 어설피게 잘못 베낀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다시 약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인 노동력을 활성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야만적·동물적 투쟁의 논리를 인간 교육에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대량실업과 급증하는 자살 사태에서 보듯이 노동력 재생산기구의 붕괴와 저임금 노동력의 누적을 가속화시켜 경제의 회생과 재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진정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교육의 발전을 추구한다면, 자가당착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은 극소수 부유층과 지배계급만을 이롭게 하고 매판 엘리트층을 양성하는 반민주적·반민중적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의 원리에 따른 진정한 인간화 교육의 초석을 놓는 작업일 것이다. ♣

정성진/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세계화인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인가", "한국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의 다수를 발표했다.